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제 안 설 명 서

2022. 1.



김 인 호 의원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김인호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이 시행됨에 따라
- 의회사무국 직제와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규칙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 안 제2조에서는 의회사무국장 사무에 주민조례발안, 사무직원의 인사, 채용, 복무, 교육, 후생, 징계, 평가 및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2조 및 제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4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 **본 규칙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1월 26일부터 2022년 2월 7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인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822016
----------	----------

발의일자: 2022. 1. 26.

발 의 자: 김인호,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홍복조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관 및 주민조례발안 도입 등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제와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 나. 의회사무국장 사무에 주민조례 발안, 사무직원의 인사, 채용, 복무, 교육, 후생, 징계, 평가 및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2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 라. 정책지원관의 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개정규칙안: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및 현행규칙 등
  - 1)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7조부터 제52조 및 부칙 제6조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 조치사항 안내(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670(2021.11.10.)호)
- 다. 비용추계: 비대상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4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7호(중전의 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4.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무

15. 사무직원의 인사, 채용, 복무, 교육, 후생, 징계, 평가 등에 관한 사무

16.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제3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
제2조(사무국장) ① (생략)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13. (생략) <u>&lt;신 설&gt;</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조(사무국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13. (현행과 같음) 14.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무 15. 사무직원의 인사, 채용, 복무, 교육, 후생, 징계, 평가 등에 관한 사무 16.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17. 그 밖에 ----- --
제3조(전문위원) ① (생략)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5. (생략)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u>&lt;신 설&gt;</u>	제3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

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칙】

###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

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

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전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
3. 소속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 조치사항 안내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 자치법규 개정사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 시행 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의회협력부서, 취합부서)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의회 관련 자치법규 개정사항 1부. 끝.

행정안전부

수신자 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부산광역시(자치행정과), 대구광역시(자치행정과), 인천광역시(자치행정과), 광주광역시(자치행정과), 대전광역시(자치행정과), 울산광역시(자치행정과), 세종특별자치시(자치행정과), 경기도지사(소통협력과), 강원도지사(자치행정과), 충청북도지사(정책기획관), 충청남도지사(정책기획관), 전라북도지사(정무기획과), 전라남도지사(정책기획관), 경상북도지사(정책기획관), 경상남도지사(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정책기획관),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장,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장,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장,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장,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장,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장,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장, 경기도 의회사무처장, 강원도 의회사무처장,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장,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전라남도 의회사무처장, 경상남도 의회사무처장(충무담당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장

주무관 김수현 행정사무관 박정배 대결 2021. 11. 10. 선거의회자치  
법규개정 권  
합조자  
시행 선거의회자치법규과-2670 (2021. 11. 10.) 접수 정책기획관-13872 (2021. 11. 10.)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여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mcis.go.kr  
전화번호 044-205-3374 팩스번호 044-204-8954 / sh7277@korea.kr / 대한민국 공가



# 【 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

\* 아래 참고안(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근거 참고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과 함께 의견조회 후 확정, 재안내 예정

주요내용	현행조문	개정조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근거	< 신설 >	<p>제○조(정책지원관) ① [사무처(국·과)/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p> <p>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li> <li>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li> <li>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li> <li>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li> <li>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li> <li>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li> </ol> <p>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국·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